

남미(南美) 언론과 언론피해구제제도

김정민 언론중재위원회 기사심의팀, 이정희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팀

I. 들어가며

언론중재위원회의 30년 역사는 우리나라 언론 자유와 인격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위원회의 언론조정·중재제도는 국가 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언론 자유의 보장과 개인의 권리와 명예에 대한 인식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현재 남미(南美) 일부 국가에서는 군사정권의 집권에 따라 미디어의 몰수와 운영상의 간섭,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수입 제한, 보도 내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언론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미 대부분의 국가에 민간정부가 들어서면서 인격권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정의되고, 언론의 자유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아직 우리나라와 같은 언론피해구제제도가 정착하지 못했다.

이에 연수단은 남미 4개국(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의 언론 유관기관과 언론사를 방문하여 위원회의 언론조정·중재제도 및 언론피해구제를 위한 활동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남미의 독특한 언론문화와 언론자유에 대한 인식, 인격권 보호 및 정

정·반론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유무 등을 관찰함으로써 남미의 언론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II. 남미의 언론기구와 독자 불만 처리

1. 페루 언론평의회

가. 구성과 역할

페루 언론평의회(El consejo de la prensa peruana)는 1997년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1990년 언론법이 제정되자 국가의 언론 통제를 우려한 언론사들이 자발적으로 협회를 구성한 것이다. 현재는 페루의 유력 일간지인 엘 코메르시오(El comercio)를 비롯하여 페루 언론사 중 약 40%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¹⁾

페루 언론평의회는 후지모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정치적 이유로 기자들이 수감되거나 처형당하는 등 언론 탄압이 지속되자 언론 자유와 언론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으나, 현재는 언론 자율 심의기구로서

1) 페루 언론평의회 홈페이지(<http://www.consejoprensaperuana.org.pe>) 참조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률이 아닌 언론의 자유와 사회정의, 윤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독자들의 불만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운영재원은 각 회원사가 분담하여 마련하고 있으며, UN 및 영국·핀란드 대사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다.

언론사의 권익 보호와 자율 심의, 독자들의 불만 처리 등을 담당하는 페루 언론평의회는 회원사의 가입, 탈퇴 여부 등 평의회 운영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명예위원회(El Consejo de Honor), 언론인 석방 운동 등 언론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운영위원회(La Junta Directiva), 독자의 정정보도 요구 및 불만 사항을 처리하는 윤리위원회(El Tribunal de Ética)로 구성된다.

나. 윤리위원회(El Tribunal de Ética)²⁾

페루 언론평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윤리위원회(El Tribunal de Ética)는 독자들의 정정보도 요청 등 불만사항을 심의하며 언론학 및 법학 교수,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정보도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언론사는 7일 이내에 해당 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는 언론사는 매우 드물다. 윤리위원회에서는 독자들의 정정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윤리위



▲ 페루언론평의회 Luis Agois Banchemo 의장(오른쪽 두 번째) 등 위원들과 함께

원회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법률이 아닌 언론의 자유와 사회정의, 윤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윤리위원회가 처리한 사건은 2008년 41건, 2009년 31건, 2010년 47건으로 이 중 약 40%는 회원사에 대한 불만 제기이며, 나머지는 비회원사와 관련된 사건이다.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Kela León Amézaga 교수는 모 타블로이드 신문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편집자가 책임을 지고 정정보도를 하게 된 사례를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꼽았다. 그러나 윤리위원회는 강제력이 없는 자율기구이므로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윤리위원회는 독자들의 불만 처리 외에도 언론인을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미디어와 민주주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언론 윤리 관련 간행물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 El Tribunal de Ética를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윤리재판소'이나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심의, 결정하는 기구의 성격을 반영하여 '윤리위원회'로 해석하였음

2. 볼리비아 신문협회

1998년 언론사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볼리비아 신문협회(Asociación Nacional de la Prensa, Bolivia)는 신문, 잡지를 발간하는 25개 언론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볼리비아의 경우, 독자의 불만이나 정보요청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문협회는 정부 등 외부 권력에 맞서 언론 자유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볼리비아 신문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윤리위원회(EI Tribunal de Ética de La Asociación Nacional de la Prensa)는 언론 윤리에 관한 불만을 심의한다. 독자들은 기사 게재 후 9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고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에서 윤리 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관계자 징계 등 제재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피해구제를 위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페루 언론평의회와는 차이가 있다. 윤리위원회는 전직 대법원장 등 법조인 1인과 전직 언론인 등 5명으로 구성되며, 2010년에는 5건, 2011년 7월 현재 2건이 접수되었고 대부분의 사건이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볼리비아 국민들은 개인의 인격권이나 언론 보도로 인한 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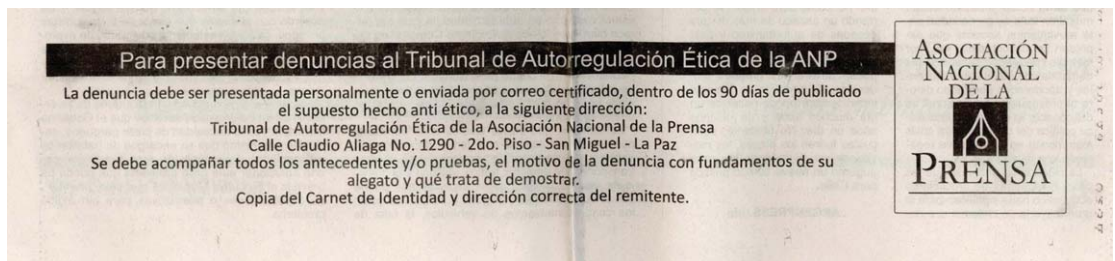
“볼리비아 신문협회는 회원사가 발행하는 모든 신문과 잡지에 날마다 윤리위원회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구제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다. 이에 볼리비아 신문협회는 회원사가 발행하는 모든 신문과 잡지에 날마다 윤리위원회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윤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독자들에게 알리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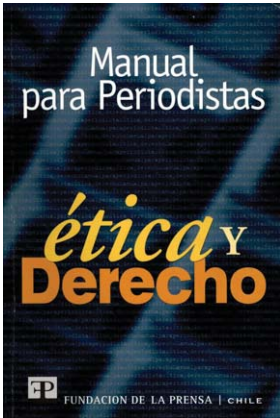
3. 칠레 신문협회

칠레 신문협회(Asociación Nacional de la Prensa, Chile)는 1991년에 신문·잡지 보도연맹, 방송협회 등 각 언론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협의체로 설립되었다. 언론의 자율 규제를 목적으로 하며, 현재 42개 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칠레 신문협회는 독자들의 불만을 처리하고 언론보도에 대해 자율적으로 심의하며 전직 언론인과 변호사, 언론학과 교수 등 10명이 평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칠레 신문협회에는 월 평균 4~5건의 불만이 접수



▲ 볼리비아 신문협회 회원사인 엘 디아리오(El Diario)에 게재된 윤리위원회 광고



▲칠레 신문협회에서 제작한 신문기자를 위한 매뉴얼 「윤리와 권리」

되는데 대부분 경미한 사안으로 실질적으로 평의회에서 논의하는 사안은 소수에 불과하다. 정정보도 게재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방법을 제시하는 페루 언론평의회와 달리, 칠레 신문협회는 개인이

언론사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률 조언 등의 상담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한편, 2006년 칠레 신문협회는 각 언론사가 취재와 보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기자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매뉴얼에는 취재윤리부터 명예훼손과 사생활 보호, 액세스(access)권 등 언론윤리와 취재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담고 있다. 평의회는 보도 매뉴얼에 따라 기사를 모니터링하고, 윤리 기준에 크게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한다.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을 심의

한 후, 주의 촉구를 위한 권고적 조치로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의 시정권고와 유사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4. 아르헨티나 신문협회

아르헨티나 신문협회(Asociación de Entidades Periodísticas Argentinas)는 1962년, 정부의 언론 탄압에 반발한 언론사 대표 38인이 설립했다. 이후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로 성장하여 현재는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를 발행하는 154개 언론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협회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은 15명, 행정인력은 45명으로 언론 자유와 보도 환경을 연구한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은 언론사에 직접 항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사건의 경우, 재판 기일이 지정되기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양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조정기간이 주어지는 데 이 기간 동안 약 90%의 사건이 해결되고 있다.

한편, 정정보도에 대한 법적 근거나 절차가 마련되

〈남미 각국의 언론 기구〉

구분	페루 언론평의회	볼리비아 신문협회	칠레 신문협회	아르헨티나 신문협회
설립연도	1997년	1998년	1991년	1962년
설립목적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 보호	언론사 권익 보호	언론 자유 및 언론사 권익 보호	언론 자유 및 언론사 권익 보호
위원 구성	언론·법학 교수, 변호사 등 7인	법조인, 전직 언론인 등 5인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학 교수 등 10인	변호사, 언론인, 언론학 교수 등 15인
회원사 수	일간지(8개), 잡지(4개) 등 15개 언론사	신문, 잡지 등 25개 언론사	42개 신문사	신문, 잡지 등 154개 언론사
불만처리 여부	소속 윤리위원회에서 처리	소속 윤리위원회에서 처리	평의회에서 심의	-
불만처리 방법	정정보도 등 해결방안 제시	관계자 징계 등 제재 조치	법률 자문 및 상담	-

어 있지 않아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하는 사례는 극히 적으며, 아르헨티나 신문협회에도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Ⅲ. 남미의 언론현황과 언론 피해 구제 절차

○○○

1. 페루 엘 코메르시오(El Comercio)

“불만 처리 전담부서 마련, 매주 고정 지면에 정정보도 게재”

1839년 남미에서 최초 발행된 전국지인 엘 코메르시오(El Comercio)는 약 170년의 역사를 지닌 페루 유력 일간지이다. Miró Quesada 가족이 대를 이어 소유해오고 있다. 1980년대까지 군부가 언론사의 소유권을 가짐에 따라 정부로부터 많은 통제를 받기도 했다. 현재 소속 기사는 약 200명이며, 약 12만부를 발행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기사도 제공하고 있다.

엘 코메르시오는 독자의 불만 처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로 두고 있다. 전담 부서에서 접수한 독자들의 불만 사항은 기사를 작성한 담당 기자에게 전달된다. 이후 편집 회의를 통해 제기된 불만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정정보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고정 코너에 게재한다. 신문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인 경우에는 언론평의회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은 보도국장 이상 간부가 담당하여 처리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사과방송이나 정정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볼리비아

“정부의 언론 탄압에서 벗어나 언론 자유 확보 시급”

가. 볼리비아 국영방송(Empresa Nacional de Television Boliviana, Canal 7)

볼리비아 국영방송은 1969년에 설립된 볼리비아 최초의 방송사다. 현재 약 10여명의 취재진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다. 1984년 Pacea de Televisión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볼리비아의 유일한 전국방송으로 정부의 정책 홍보 등 공익 증진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오직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함으로써 대통령의 선전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볼리비아 국영방송 Carlos Orias 보도국장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불만은 보도국장 이상 간부가 담당하여 처리하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사과방송이나 정정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볼리비아 국영방송은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시청자가 프로그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 라 프렌사(La Prensa)

1998년 창간된 라 프렌사(La Prensa)는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La Paz)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이다. 최근에는 정치 위주의 기사에서 벗어나 독자들에게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치·경제, 음악·문화 그리고 스포츠 등 분야별 섹션 발행을 시작했다. 현재 10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취재기자는 48명이고 온라인 기사는 전문 편집자 1명이 담당하고 있다. 라파스를 제외한 지역이나 해외 소식은 타 언론사의 제휴 기사를 싣고 있다.

독자가 제기한 불만은 편집국장이 직접 처리하며, 문제가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직접 유감을 표시하거나 원하는 경우 지면을 통해 사과보도를 게재한다. 정정보도의 경우 문제가 된 지면에 원 보도의 크기로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11년 3월 21일에는 취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 강령을 제정하여 기사에 가급적 복수의 취재원을 기재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 철저히 사실에 기초한 보도관행을 통해 오보와 분쟁을 예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라 프렌사의 Luis Agoir Banchoero 대표이사는

1929년 인쇄법이 제정되었으나 법률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언론 보도와 취재 윤리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언론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라 프렌사의 경우, 2010년 현직 장관이 트럭 33대를 밀수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 사실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게재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 중인 상황이다. Luis Agoir Banchoero 대표는 최근 발의된 통신법 역시, 정부가 모든 정보원을 통제하고 언론과 국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목적이 엿보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 라 라손(La Razón)

1990년에 창간된 라 라손(La Razón)은 볼리비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신문사이다. 약 30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이 중 40명이 취재기자로 근무하고 있다. 안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주중에는 3만 5천부, 주말에는 4만 5천부를 발행한다. 몇 년 전까지 반정부 성향의 보도로 인해 정부로부터 많은



▲ La Razón 2011. 7. 12자 3면에 게재된 정정보도³⁾

3) 2011. 7. 9자 3면에 게재된 보도에서 아메리칸컵에서 볼리비아가 우승할 경우 자신의 신체에 관한 약속을 한 사람은 Romy Villanueva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면 사과한다는 내용의 정정보도

압력을 받았으나 최근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정부와의 관계가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한다.

라 라손에는 2명의 기자가 온라인 뉴스를 전담하고 있는데, 최근 지면에 게재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뉴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볼리비아의 어려운 경제상황 탓에 스페인과 인근 남미국가로 이민을 떠나는 인구가 해마다 늘면서 이민자의 온라인 뉴스 이용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정정보도 요청에 대한 대응 방법을 묻자 Carlos Orias 편집국장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기사는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면서 “라 라손은 독자의 정정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담당자가 직접 사과를 하고 정정보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2~3일 안에 지정된 지면(A3면 또는 31면)에 싣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정보도의 내용은 「○월 ○일자 ○면에 실린 기사에 대해 독자 A씨의 항의로 정정한다」와 같이 필요한 사항만을 언급하여 간략히 보도하고 있다고 한다.

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건·사고 보도에서 피해자의 초상이나 사체 사진을 그대로 싣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익명 보도를 원칙으로 하는 등 보도관행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3. 칠레

“언론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어려워”

언수단은 칠레의 소송 절차 및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피해구제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인 Belisario Prats Palma 교수를 만났다. 남미 국가 중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룬 국가인 만큼 효율적인 법률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소

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오보에 대한 법적 구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처리 기간이 10년 가까이 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아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한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신속한 처리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법적 구제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 보였다.

Belisario 교수는 독재 정권 하에서 탄압받았던 언론 자유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칠레에도 우리 위원회와 같이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호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범죄 피의자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 명예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우리 위원회의 조정·중재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4. 아르헨티나 클라린(Clarin)

“언론법 통한 언론사 소유권 규제에 적극 대응 중”

클라린(Clarin)은 1945년 창간되어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신문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를 중심으로 약 33만부를 발행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최대 미디어 회사인 클라린 그룹(Grupo Clarin)은 신문, 방송, 잡지 등 다수 매체를 소유하고 있다.

2009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언론사의 소유권을 제한하기 위해 언론법(Ley de Medios)을 제정하였는데, 정부에 비판적인 클라린을 겨냥한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언론법은 전체 언론사의 3분의 1을 정부가 소유하고 개인과 비영리단체가 각각 3분의 1을

“이번 실무연수는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의 언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남미의 언론피해구제기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된 소중한 기회였다. 특히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할 때마다 부러운 시선을 보내던 남미 언론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언론 환경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존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던 클라린 같은 대형 언론사는 소유권의 일부를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또한,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소유권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매우 짧게 주어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클라린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언론은 신문협회 등을 통해 정부의 언론사 소유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IV. 마치며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는 독재 정권의 언론 탄압 시기를 거쳐 언론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새로이 정비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나 민족적 특성이 다른만큼 언론과 정부의 관계,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 언론사의 소유권을 정부에 빼앗기는 등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페루는 방문 국가 중 가장 발전된 형태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페루 언론평의회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독자와 언론사 간 분쟁을 처리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와 가장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편, 정치·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볼리비아의 경우 언론사 내부적으로는 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의 언론탄압과 규제로 인해 언론 자유가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볼리비아 언론인들은 각 언론사가 친(親) 정부, 반(反)정부의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고 자유롭게 사회 감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방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선 상황이었지만 정치·문화적으로는 독재정권으로부터 입은 상처가 완벽히 치유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극심한 빈부 격차와 계급 구조로 인해 모든 국민이 평등한 입장에서 법률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실무연수는 페루,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의 언론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남미의 언론피해구제기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된 소중한 기회였다. 특히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할 때마다 부러운 시선을 보내던 남미 언론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나라 언론 환경과 법률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언젠가 위원회의 조정·중재제도가 지구 반대편, 남미에 정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